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사실로...속속 드러나는 거짓말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계획 맞춰서 공사 진행? 사고 직전 공정률 57%로 2달 가량 늦어져 발령 2주 돼 잘 모른다? 2019년 5월 공사개요서에 현장소장 버젓이 경찰 수사 과정 속속 밝혀져...안전관련 자문회의 거쳐 수색작업 재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 수사로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관계자들의 발뺌과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책임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공사 관계자들이 허위 진술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행태를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애초 공정보다 빨리 진행됐다'더니=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현산) 측은 사고 직후 늦어진 공사기간을 맞추려 서두르는 과정에서 빚어졌다는 지적(광주일보 1월 13일 1면)에 "공사계획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가 자체 공정표가 공개되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도 3일 수사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붕괴된 201동 건물의 PIT층(전기·배관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 공정을 지난해 10월 25일 시작했어야 했지만 민원 등으로 착공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로는 올해 1월 11일 해당 피트층 바닥을 타설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공정이 2달 가량 늦어졌다. 사고 직전까지의 공정률은 57%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산측의 "공기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못 박았다.

◇'발령받은 지 2주 밖에 안돼 잘 모른다'더니=현산측 현장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령 받은 지 2주 밖에 되지 않아 사고 현장 상황을 잘 모

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공사인 현산측이 아파트 착공 전인 2019년 5월 작성해 광주시 서구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상 공사개요서에는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은 지 2주 밖에 되지 않았다는 관계자가 적시했다.

시공사가 같은 시기, 서구에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조직도에는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으로 사진과 함께 적혀있다. 이런데도, 상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발뺌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도 드러나=경찰은 서구에 제출된 감리보고서의 허위 작성 사실도 확인했다.

당장, 지난 1월 10일 서구청에 보고된 2021년 4분기(10월-12월) 감리보고서상 공정률의 경우 계획공정(60.3%)을 넘어선 62.6%를 달성, 실행공정이 103.8%에 달했다고 적혀있지만 경찰이 파악한 당시 공정률은 계획공정(60.3%)에도 못 미치는 57%였다.

경찰은 감리가 존재 의미를 망각했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계획서, 공사계획서대로 시공되는지 살피고 점검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서구에 제출된 감리보고서가 대부분 '공정,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이 보통 이상의 평가 기준으로 양호하다고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형식을 갖추기 위한 보고서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게 경찰 설명으로, 객관적인 자료로도 부실 감리가 확인된 상태



광주 서구 아이파크 붕괴사고 24일째를 맞은 3일,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전문가 자문단이 지난 2일 추가 붕괴가 발생한 29층과 28층 지역을 찾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는 것이다.

감리 관계자는 이미 "사고 당시 현장의 동바리기 제거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한 상태.

경찰은 이의 동바리기(지지대) 철거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측과 하청업체측의 엇갈린 진술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또 재해도급 여부도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나오는데로 조만간 결론낼 전망이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토대로 이달 하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감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우선적인 신병 처리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 감리 3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건축

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매몰자 및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은 3일 오후 건축물 안전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재개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해외서 걸려온 전화, 국내 휴대전화 '010'으로 변환 변작 중계기 활용 보이콧피싱 가담한 일당 3명 검거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변작 중계기'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보이콧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것으로, 중계기에 국내에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해두는 간단한 방법으로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보이콧피싱으로 의심해 받지 않는 수신자를 속이기 위한 것으로, 11명이 3억5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3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차량에 이동식 중계기를 설치하고 전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발신 번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감시원의 의심 신고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하루 일당으로 몇만원~4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단말기 65대, 유심칩 295개, 무선공유기 22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010' 전화번호로 수신되더라도 안전 계좌로 송금이나 직접 전달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는 보이콧피싱 범죄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국선변호사 야간·휴일 업무도 보수 받는다

기본업무 외 합의 진행도 지급
법무부,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기본 업무 외에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를 한 경우에 앞으로는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보수기준표에 없었던 업무가 증액 사유로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해 개정된 보수기준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혼란을 피하고자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수기준표는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가 없어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 비판이 있었다.

개정 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측 관계인, 가해자, 가해자 측 관계인과 상담하는 등 합의를 위한 업무 수행을 할 때 보수가 증액된다. 대면 상담이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진 경우 또는 피해자 조사 참여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져도 증액된다.

기본업무 외 수사절차 참여시 '항고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됐고, 기본업무 외 공판절차 참여시에는 '피해자와 대면 상담'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속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차로 보행자 치고 뺑소니 장성군 공무원 붙잡아 조사

장성경찰은 3일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도주치사)로 장성군 공무원 A(2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 40분께 장성군 황룡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보행보조기구에 의지해 길을 걷던 B(여·88)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인근 현장 CCTV를 검색, A씨의 차량을 확인 사고 발생 20여분 뒤 거주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날이 어두워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